

석사학위논문

군의 대민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25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안전학과

사회안전정책전공

양 동 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공평원

군의 대민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Case Study on Types of Civil-Military Support

202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안전학과

사회정책전공

양 동 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공평원

군의 대민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Case Study on Types of Civil-Military Support

위 논문을 사회안전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안전학과

사회정책전공

양 동 신

양동신의 사회안전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조 용 민 (인)

심 사 위 원 최 천 근 (인)

심 사 위 원 공 평 원 (인)

국 문 초 록

군의 대민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사 회 안 전 학 과
사 회 정 책 전 공
양 동 신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기후변화, 전염병 확산, 대규모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협의 증가에 따라 군의 대민지원 활동이 재난 대응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점을 조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군은 국가 방위와 관련된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하지만, 재난 상황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구조 그리고 대민지원 통해 국민 생활이 안정을 찾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군의 대민지원 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연구는 대민지원의 전담 조직과 인력 양성의 필요성, 예산의 안정적 확보, 민·군 협력체계 강화 등을 포함하여, 대민지원 활동이 군의 본래 임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수행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대민지원 활동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와 통합 지휘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구호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대민지

원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군의 대민지원 활동이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핵심적 요소임을 확인하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군과 민간 기관이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재난 상황에서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재난관리, 민군협력, 긴급구호, 지역사회 연계, 대민지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 목적	2
제 3 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3
제 4 절 연구의 기대효과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군의 대민지원	4
1) 대민지원의 개념 및 중요성	4
2) 대민지원의 유형	6
가) 재난 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	6
나) 대민지원 현황	7
3) 대민지원의 실태	10
가) 대민지원 법령과 제도	10
나) 대민지원 조직 및 기구	12
4) 외국군 실태	14

가) 미국	14
나) 독일	15
다) 프랑스	16
라) 영국	17
마) 일본	18
 제 2 절 대민지원 체계	19
1) 군 대민지원 지침	19
2) 권한위임	20
3) 대민지원 가능 및 불가능 사항	21
4) 시기 및 통제	22
5) 통합방위기구	22
 제 3 장 대민지원 사례	25
 제 1 절 긍정적 사례	25
1) 코로나19	25
2) 수해복구	27
3) 산불복구	29
 제 2 절 부정적 사례	31
1) 해병대 순직사건	31
2) 폭설 사다리 추락사고	33
 제 3 절 해외 사례	36
1) 미국	36
2) 일본	37

3) 필리핀	38
4) 서아프리카	39

제 4 장 활성화 방안 40

제 1 절 군 특수성에 따른 개선방향 40

1) 군 특수성 반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40
2) 대민지원 전담 부대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40
3) 군 특수성에 따른 유연한 작전 수행 체계 마련	41
4) 평시 대민지원 홍보 및 인식 제고	41
5) 자원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42

제 2 절 민·군 협력 42

1) 민·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협약 체결	42
2) 통합 지휘 및 의사소통 체계 강화	43
3) 정기적인 민·군 협력 훈련 실시	43
4) 민·군 협력 관련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43
5)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	44

제 3 절 조직 및 예산 44

1) 대민지원 전담 조직의 구축과 운영 효율화	44
2) 대민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 효율화	45
3) 비상 예비예산 제도의 도입	45

4) 지역사회 및 민간과의 예산 협력 체계 구축	46
5) 대민지원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	46
제 4 절 대민지원 활동의 사회적·경제적 효과 분석	47
1) 사회적 효과	47
2) 경제적 효과	47
제 5 절 전투준비태세	48
1) 전투 준비와 대민지원 활동의 균형 유지	48
2) 전투준비와 대민지원의 상호 보완적 연계	49
3) 전투준비태세와 대민지원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체계 구축	49
4) 대민지원 임무수행 중 전투준비태세 유지 방안	50
5) 전투준비와 대민지원 활동의 전략적 통합	50
제 6 절 동기부여	51
1) 대민지원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	51
2)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	51
3) 군 장병들의 대민지원 참여를 위한 리더십 발휘	52
4) 대민지원 활동의 성과와 의미를 명확히 전달	52
5) 대민지원 활동을 통한 군의 이미지 향상	53
제 7 절 해외 사례의 교훈 및 적용 방안	54

1) 미국	54
2) 일본	54
3) 독일	54
4) 필리핀	55
5) 한국 대민지원 체계에 대한 적용 방안	55
가) 지휘 체계 표준화	55
나) 전문부대 편성	56
다) 지역화 전략	56
라) 국제협력 네트워크	56
 제 5 장 결 론	 57
 참 고 문 헌	 59

표 목 차

[표 2-1] 재난 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	7
[표 2-2] 대민지원 세부 지원현황	9
[표 2-3] 대민지원 관련법규	12
[표 2-4] 재난관리 업무 체계도	14
[표 2-5] 지원가능,불가능 사항	22
[표 2-6] 지휘 및 협조체계	24
[표 2-7] 군 안전사고 현황	35
[표 2-8] 군 안전사고 원인	35

사 진 목 차

[사진 3-1] 태풍 '힌남노' 대민지원	28
[사진 3-2] 24년 7월 집중호우 대민지원	39
[사진 3-3] 강화군 마니산 산불 현장 대민지원	30
[사진 3-4] 강릉 산불 현장 대민지원	31
[사진 3-5]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상황	37
[사진 3-6] 카트리나 헬기 대민지원	37
[사진 3-7] 일본 반도 7.6강진 해안선 변화	38
[사진 3-8] 동일본 대지진 미군 대민지원	38
[사진 3-9] 슈퍼태풍 '하이옌' 이 지나간 마을	39
[사진 3-10] 필리핀 '하이옌' 베트남 북동부 상륙	39
[사진 3-11] 해외긴급구호대 1진 활동모습	40
[사진 3-12] 콩고민주공화국 치료센터	40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사회는 기후변화, 전염병 확산, 대규모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기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 상황은 국가 안보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복구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군은 기본적으로 국가 방위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지만, 재난 대응 및 복구,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대민지원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군이 단순히 방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국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공공 안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서 군사적 대비 태세 유지가 중요하다(김영호, 2021). 재난 대응 체계 내 군의 역할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안보연구원 연구보고서.

그러나 자연재해와 사회적 위기를 포함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증가로 인해 군은 재난 대응에서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확장은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의 대민지원 활동은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군의 대민지원 활동이 재난 대응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조명하고, 이러한 활동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대민지원 활동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군의 대민지원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구호를 제공하고, 복구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의 신속한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지역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의 대민지원 활동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탐구한다. 궁극적으로는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군의 대민지원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재난 발생 시 군이 수행하는 긴급 구조와 복구 지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구호 활동을 포함하여 분석한다(국방부, 2019). 이를 통해 군의 역할이 단순한 전투 및 방어 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지원하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 및 군부대에서 제시한 대민지원 지침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민지원 활동 체계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각 상황에 따라 군이 대민지원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비교 검토한다. 또한, 대민지원 활동의 세부 분야를 농촌 일손 돕기, 재난 복구 지원, 의료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각 활동의 특성과 현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민지원 활동이 군 장병들에게 주는 영향과 군의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조명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민지원 활동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우선 국방부 및 각 부대에서 제공하는 정책 자료와 대민지원 활동 관련 문헌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대민지원 활동이 재난 대응에서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한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도출한다. 또한, 국내외 유사 사례와 선행 연구를 통해 대민지원 활동의 다양한 운영 방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대민지원 활동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자 한다. 아울러, 군과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와 민간 구호 단체와의 협력 방식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대민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탐구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민지원 활동이 국가와 국민에게 가져오는 긍정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 4 절 연구의 기대효과

군의 대민지원 활동이 국가적 재난 대응체계 내에서 가지는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 방안을 통해 군과 민간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군의 역할이 더욱 명확하고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군의 대민지원 활동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국방부, 2022. A)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군의 대민지원

1) 대민지원의 개념 및 중요성

대민지원의 개념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사전적 개념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방부의 「재난관리 업무처리 훈령」(훈령 제1013호, 2009) 제2조 5항과 「대민 지원활동 업무 훈령」에 따르면, 대민지원이란 '중앙 또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 사고수습본부, 중앙 또는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등으로부터 군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인명구조, 장비, 인력, 물자, 의료 및 방역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육군본부의 『군사 용어 술어 사전』(1988)에 따르면, 대민군사지원은 '해당 민간 당국의 요청 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민의 질서 유지와 복지 보존을 돕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군사 활동'으로, 이 활동은 주로 재난, 폭동, 기능 발휘를 위협하는 상황 등 국내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된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서 발간한 합동 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2014)에서는 대민군사지원을 '민간 당국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주민의 질서 유지와 복지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군사 지원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육군본부의 설명과 유사하나,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지시'로 표현하고 후반부의 설명을 생략한 차이점이 있다.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군사 용어사전』(2006)은 대민지원을 '군의 자발적 참여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군이 지역사회와 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대민지원은 지

원 창구를 행정관서로 일원화하고, 지원의 지역과 범위, 장비 및 물자,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협조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대민지원 정의와 비교할 때, 군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대민지원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뿐 아니라 재난·재해, 사이버 공격, 테러 등으로 인해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과 국민 생활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포괄적 안보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전통적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과 같은 다방면의 전방위적 대응 수단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군사적 분야에서도 군의 선제 대응과 적극적 참여가 중요해졌고, 이를 반영하여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재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2005)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은 장관의 재난관리 집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군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민·관·군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대민지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건전한 민군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역사적으로도 군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나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재난 복구 지원, 농촌 일손 돕기,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대민 봉사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왔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 받는 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재해·재난 시 대민지원 활동을 지속함과 동시에, 중앙 정부 차원의 재난 예방 및 대민지원 관련 법령과 규정, 방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병 인권 보장, 복무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선진병영 문화 정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 대민지원의 유형

가) 재난 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

[표2-1]

	태풍/집중호우	가뭄	폭설	적조
자연 재난	하우스/양식장복구 농경지/가옥정리 농작물복구/벼세우기 가축처리/방역 인명구조/의료지원 도로/하천정비 용수로/하천준설 토사/오물제거 사체발굴	저수지준설 심정개발 용수로준설 식용수수송 공업/농업용수 지원 급수지원	하우스/농경지복구 벼씻/인삼밭복구 가옥정리 도로제설 축사복구 사체발굴	폐사어류 수거 적조예찰활동
인적 재난	산불진화	침몰선박구조	지하철사고	항공기사고
	헬기지원 임야/농지복구 토사/오물제거 화재진화	침몰어선구난 인명구조 탐색지원	인명구조/후송 화재잔해제거	사망자수습 피해현장정리 현장경계
사회적 재난	기간산업파업	구제역	조류독감	재선충
	기관사요원지원 안전요원지원 군기능인력지원	매물지원 도로제독/방역 경계초소 운영	수송/매물 도로제독/방역 경계초소 운영	고사목수송

유용진. (2016). "조직 구조적 속성이 군 재난관리체제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현재 우리 군의 재난관리 체계는 군내 재난관리,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대민지원, 그리고 해외 긴급구조 지원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군내 재난관리는 크게 재난 예방 및 대비, 재난 대응, 그리고 재난 피해 복구의 세 가지 업무 분야로 나뉜다(국방부, 2024). 재난 예방 및 대비는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을 지정하여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재난유형별 메뉴얼을 정비하고 재난 대비 훈련 및 교육을 하는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또한, 군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재난 대비 태세 지도 점검 등이 이 과정에 포함된다. 재난 대응은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부대 활동 지침을 작성하여 하달하고 시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 피해 복구는 피해 복구 절차 교육과 피해 상황 신고, 피해 복구비 지원 등을 통해 재난 발생 후 신속하게 피해 복구 업무를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나) 대민지원 현황

우리 군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 종료 후에는 피해 복구 작업을 통해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년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집중호우와 9월 제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군이 장병 75,126명과 덤프트럭, 굴삭기 등 장비 4,645대를 투입하여 복구를 지원했다. 특히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역에서는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와 고무보트(IBS)를 사용하여 27명을 구조했으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2명은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구조하는 등 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민 지원이 이루어졌다. (국방부, 2022. C) 또한, 우리 군은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범정부 코로나19 대응을 적극 지원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연인원 170만여 명의 의료·행정 인력을 투입하였으며, 국군수도병원 등 군 병원과 국방어학원 시설을 각각 감염병 전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군 소독 차량, 수색 및 포획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국방부, 2022. B). 2022년 10월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 발생 시에도 시추대대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매몰된 광부 구조작전에 기여하였다(국방부, 2022. D). 최근 5년간 우리 군은 재난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장병 269만여 명과 장비 17만 1천여 대를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 현황은 [표2-2]와 같다(국방부, 2022. E). 우리 군은 앞으로도 재난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다.

[표2-2]

연도	지원내용	인원(명)	장비(대)
2018	총계	2,699,121	171,486
	소계	44,560	9,832
	산불지원	8,970	186
	가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16,125	8,168
	실종자 수색 구조	1,165	219
	구제역 AI 방제	10,452	1,246
	폭설, 지진 피해 지원	7,848	13
2019	소계	204,988	11,484
	산불, 화재	22,242	526
	폭염 가뭄, 태풍 호우, 폭설	64,745	2,319
	실종자 수색 구조	4,208	748(군견15)
	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108,985	7,490
	철도·화물 노조 파업 관련 지원	3,900	-
	해양오염, 인천 적수 등	908	401
2020	소계	674,452	48,405
	산불, 화재	1,984	89
	폭염가뭄, 태풍 호우, 폭설	128,699	17,063
	실종자 수색 구조	5,604	778
	AI ASF 확산 차단	60,161	6,108
	코로나19 대민지원	478,004	24,367
2021	소계	1,111,888	61,108
	산불, 화재	1,031	122
	폭염가뭄, 태풍 호우, 폭설	5,672	131
	실종자 수색 구조	5,932	367
	AI ASF 확산 차단	201,685	17,047
	코로나19 대민지원	869,120	43,439
	화학사고, 농번기 등	28,448	2
2022	소계	663,233	40,657
	산불, 화재	23,265	1,139
	폭염가뭄, 태풍 호우, 폭설	74,469	4,639
	실종자 수색 구조	2,856	343
	AI ASF 확산 차단	153,431	28,430
	코로나19 대민지원	405,961	5,897
	화학사고, 농번기 등	2,833	-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지원	418	209

국방백서 2022

급격한 기후변화와 재난의 대형화로 인해 재난 피해를 본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복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외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해외 긴급협의회가 이루어낸다. 국방부는 긴급구호, 구조 인력, 물품의 수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5월부터 ‘해외 긴급구호 군 수송기 임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아시아 지역 15개국에서 재난 발생 시 해외 긴급구호대를 48시간 이내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국방부, 2010). 코로나19로 초래된 글로벌 보건 위기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공군 C-130 승무원들은 코로나19의 확진 가능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년 7월 필리핀과 민간항공 직항 노선이 없는 동티모르에 KF94 방역 마스크 40만 장을 수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국방부, 2020. B). 2021년 제1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는 재난구호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ADMM-Plus 국가의 군 활동 및 역할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제7회 지역 자문그룹(Regional Consultative Group) 연례 회의를 통해 화물 하역 및 승무원 체류, 이동 수단 확보 등 우리 군 수송기의 원활한 해외 긴급구호 임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현지 민간 및 군과 협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공동 재난 대응에서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2021년 6월 우리 군 수송기가 해외재난 긴급구호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군용 항공기의 해외사고 대응매뉴얼」을 제정하였다(국방부, 2021. B). 주요 내용은 신속한 상황 전파, 상호 협력·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및 수습 체계 강화를 위한 절차, 관련 기관의 임무와 역할, 대응절차와 조치 사항이다. 또한, 해외재난 발생에 따른 군 수송기 지원 시 피해국 재난 대응 체계와 다국적군 협조 체계에 대한 임무 요원들의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긴급구호 임무 시 활용을 위한 민군협력 Guide Book’을 제작하여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승무원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안내서는 아

태지역의 재난 대응 개관과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5개 재난 취약 국가별 재난 대응 체계로 구성되었으며, 매 2년 단위로 책자 개정에 맞추어 한글 안내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한민국 해외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훈련은 온라인 국내 합동 모의훈련으로 실시되었으나, 2022년에는 군 공중급유기를 지원하여 적재 훈련을 함으로 긴급구호대의 해외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국방부, 2022. F).

3)대민지원 실태

가) 대민지원 법령과 제도

과거 군사력 중심의 전통적인 안보 개념은 외부의 군사적 침입에 대응하는 데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포괄적인 안보 개념으로 확장되어 재난 관리 및 국가 핵심 기반 보호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9조(동원 명령 등), 제44조(응원), 제57조(항공기 등 조난 사고 시의 긴급 구조 등)에서는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군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재난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포괄적 안보 개념 아래에서 재난 관리 업무를 '전쟁 이외의 작전'으로 정의하고, 이를 군의 기본 임무로 삼아 재난 관리와 지원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민 지원과 관련된 법규는 [표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2-3]

구분	내 용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 국방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법률 제8149호, '00.12.3)
훈령	● 대민지원활동업무 훈령 ● 국방 재난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570호, '13.10.8) ● 재난대책업무처리 규정(국방부훈령 제849호, '07.12.31) ● 국방공보 규정(국방부훈령 제786호, '06.3.2) ● 연합 및 합동훈련 피해보상 규정(합-341-규-02, '99.5.10) ● 민북지역 민사활동 규정(합-341-규-01, '07.7.2) ● 군 사고예방 규정(국방부훈령 제803호, '06.11.13) ● 정훈·문화활동 규정(국방부훈령 제799호, '06.10.1) ● 군 환경관리 규정(국방부훈령 제837호, '07.10) ●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규칙(국방부령 제1486호, '98.10.10)

이원희, (2020)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대민지원 개념 및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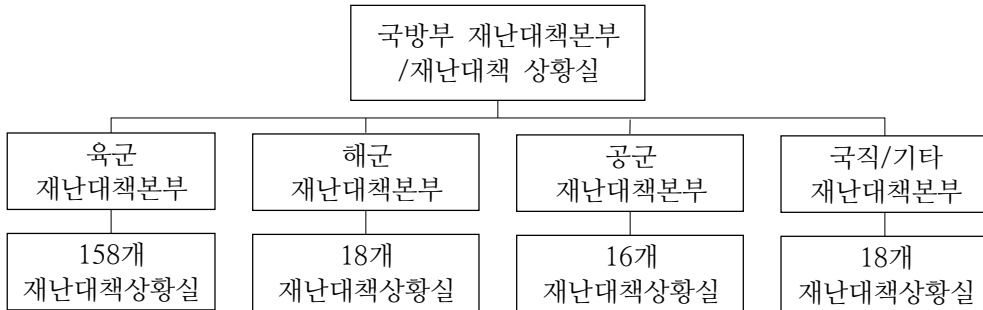
각급 부대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민지원 활동은 민·군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민지원 활동을 펼쳐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바탕으로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훈령을 제정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2조(대민지원 기본 지침)에 따르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력과 장비 등의 지원 요청을 받은 각급 부대의 지휘관은 군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각 군 참모총장은 대민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하고 통제하며, 합동참모의장은 대민지원 시 각급 부대가 타 작전사 책임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주요 전투 장비를 투입할 때 이를 조정하거나 통제한다. 또한,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3조(대민지원의 절차)에서는 지

방자치단체와 재난관리 책임 기관을 거쳐 공문, 유선, 방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만 대민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민지원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개별적인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민지원 현황은 지휘 계통을 통해 국방부 재난상황실로 보고되며, 군수 물자(양곡, 피복류 등) 및 장비 지원은 사전에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군 동원 및 재난 지역의 예비군 훈련 통제는 수임 군 부대장의 책임하에 시행되며, 상급 부대로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대민지원 조직 및 기구

대민지원에 관한 국방부의 총괄 부서는 국방부 기획조정관실이며, 군수관리관은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대민지원이 군의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며, 각 군 본부는 재난 예방, 대비, 복구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한다. 예하 각급 부대는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대민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국방부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매우 크거나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 발생이 우려될 때 설치되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발생했을 때 재난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 재난관리 지원팀은 군의 재난 관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민·관·군 협조 체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포괄적 안보 개념 아래에서 재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각 군, 국직 부대 등 국방 재난 대책본부와 재난 대책상황실은 육군 158개소, 해군 18개소, 공군 16개소, 국직 및 기타 부대 18개소 등 총 21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표2-4]



유용진, “포괄적 안보측면에서 재난발생시 군의 역할 증대 방안 연구 : 육군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6), p.19.

육군은 재난 발생 시 정부의 긴급 구조기관의 능력 초과 상황에서 재난 구조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를 편성하고 운용한다. 이를 위해 육군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구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재난이나 고립된 주민 구조, 폭발 및 붕괴 사고에서의 인명 구조 활동, 열차와 지하철 사고 대응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제공한다. 현재 재난 구조부대는 특수전사령부의 6개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여단은 약 230명의 규모로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 부대는 육군본부의 지휘통제 하에 활동하고 있다. 또한, 탐색 구조부대는 군 내 16개 부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재난 발생 시, 항공기 및 선박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탐색 구조를 지원하거나 다른 재난 구조부대를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육군은 재난 구조와 탐색 구조 부대 외에도 각 지역의 향토사단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재난 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이들 사단은 지역 책임 부대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정을 체결하여 재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국방부, 2021. A).

4) 외국군 실태

가) 미국

연방 위기관리청(FEMA)은 27개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 응급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응급 지원을 15개 주요 기능으로 나누어 각 기능에 대해 책임 기관과 지원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의 역량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군의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은 기본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국방부 지침, 그리고 미 합동교범 3-07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군의 민간 지원(MACA)은 민간에 대한 군의 지원(MSCA)과 민간 소요에 대한 군의 지원(MACDIS)을 포함하며, MACA는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에 대응하는 국방부의 대책을, MACDIS는 미국 내 테러 상황에 대한 연방 및 지방 정부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을 포함한다(미 국방부, 2021).

미국의 국가안전 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미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미합중국의 통치권을 유지하며, 국가와 국민의 번영을 도모하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MACA는 이러한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국가가 요구할 때 군이 대응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의 테러, 대규모 살상 무기, 불법 마약 유통, 기타 위협이 타 부처의 대처 능력을 초과하거나 군사력의 사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군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MACDIS는 테러, 산불, 홍수, 돌풍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 국가사업 지원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된다. MACA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첫째, 민간 정부 기관이 필요한 자원은 먼저 민간 기관이 조달해야 한다. 둘째, 재난 대응이나 복구를 위한 국방부의 재원은 민간 정부 기관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제공된다. 이 결정은 FEMA(연방 비상관리청)나 기타 주무 기관(LFA)이 내린다. 셋째, 국방부는 공중 보급, 정찰 등 특화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군은 항상 군 명령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국방부의 권위 아래에 통제된다. 넷째, 군은 민간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임시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는 한, 군 본연의 임무가 MACA의 임무보다 우선한다.

미국은 여러 차례 군을 동원하여 대민지원 활동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절 항공관제사들의 파업 당시 군이 항공관제 업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항공 교통의 혼잡을 해소했으며, 1992년 허리케인 '앤드루'와 2005년 뉴올리언스 지역의 허리케인 피해 상황에서는 해군 병원선, 구조팀, 헬기 등을 동원하여 대규모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연방위기관리청, 2006).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발생 시에도 주 방위군이 소집되어 재난 대응을 지원했다. 또한, 9.11 테러 발생 후, 복구 현장에 군을 투입하여 치안 유지와 정부 기관 활동을 지원한바 있다는 것을 통해 한미 우호 친선 행사나 김치 담그기, 소규모 친선 행사 등을 지원하며, 이러한 활동은 휴일이나 경축일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나) 독일

독일은 강력한 비상 대책 및 위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규모 위기와 재난에 대처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시민 보호는 연방정부의 책임 아래 있으며, 재난 보호는 주정부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된다. 각 주정부는 소방 및 지원 조직과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며, 재난 발생 시 연방, 주, 관구, 시군,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진다. 대민지원은 기본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로 경찰력 지원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연 재난이나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각 주는 다른 주의 경찰력, 다른 행정기관, 국경수비대, 연방군의 인력과 자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군의 재난 지원 활동은 반드시 관할 정부 기관(연방 내무부, 주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군이 독자적으로 재난 관리 활동을 전개할 수는 없다. 또한, 군은 재난 발생 시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

라 지원을 제공하며, 자체 판단으로 군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독일의 재난 보호 시스템은 다양한 조직들과 협력하여 긴급재난 시 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독일 연방내무부, 2022). 이 시스템은 소방서, 기술지원처(THW), 경찰, 자원 소방 단체, 독일 소방협회(DFV), 민간단체인 근로자 자선단체(ASB), 독일 생명 구조협회(DLRG), 독일 적십자사(DRK), 존스앰블런스 협회(JOH), 말타 자선회(MHD) 등 여러 기관이 포함된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의 공공기업, 민간 소방시설, 연방 방위군, 연방 수비대, 개인 긴급 호송시설, 개인병원, 병원, 사회복지단체, 보건 행정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대응한다. 독일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약 170만 명의 명예직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110만 명은 의용소방대에서, 52만 명은 민간 지원 조직에서, 8만 명은 연방 기술지원처(THW) 산하 조직 및 지역사무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독일 민간 지원 조직, 2022).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은 독일의 재난 관리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 프랑스

프랑스는 2004년 재난관리법 체계 개편을 통해 중앙, 지방, 민간 주체들 간의 협력 체계와 책임 분배 방식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 체계는 "ORSEC 대책(Dispositif Organisation de la réponse de sécurité)"이라 불리며, 재해 구호 활동은 ORSEC 재난관리 체계 안에서 ‘대민지원(Soutien des populations)’ 서비스로 운영된다. 대민지원 관련 근거는 『시민 보호법』(2022)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의 준수 및 실행은 내무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방 및 시민 안전위원회가 설립되어 시민 안전 조치의 준비, 조정 및 시행, 자국 내 시민 안전에 대한 예방과 구조 활동, 국가의 개입 등을 활성화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는 민방위 전문 군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작전 분야는 산림 화재, 지진, 홍수 및 태풍, 식수 정수, 공해 제거, 화생방 오염 복구, 인도주의적 구호 지원 등이다(프랑스 국

방부, 2022. A). 또한, 예비 시만 예비군으로 구분되며, 시민 예비군은 국민과 군대 간의 연대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군 당국과 협의로 군 특정 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에 동원된다. 프랑스의 중앙 부처 중 국가 위기관리와 관련된 핵심부처 3개는 내무부, 외교 유럽부처(외교통상부), 그리고 국방부이다. 내무부는 국내 치안과 지방 행정의 주체로서, 국가 전체의 위기관리와 자연재해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내무부의 하위 조직인 ‘시민(방어) 안전총국(Direction de la Defense et de la Securite Civile)’은 국가의 위기관리 및 자연재해 대응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해당 부처는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의 위기 대응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프랑스의 ‘시민 안전군사교육단(Formations militaires de la securt civil)’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산업(기술) 재해에 대한 긴급 대응, 특수 상황 대응 및 안전 처리 임무를 수행한다. 이 단체는 재난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대응 인력을 확보하는 역할도 한다. 국방 안전위원회(Service Du Hat Fonctionnaire de Défens) 지원실은 국방 시민 안전 총국장이 이끌며, 내무부 소속 기관과의 협력 아래 민방위 활동을 총괄 조정하고, 민방위 계획 수립과 집행을 담당한다(프랑스 국방부, 2022. B).

라) 영국

영국의 재난 안전 관리 책임 기관은 주요 중앙 부처, 지방 행정 기관, 그리고 비상 대비 및 복구 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영국 내각사무처, 2022). 중앙 정부의 총괄 부처는 내각사무처 비상대비실(CCS)로, 2001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비상대비실은 재난이나 비군사적 위협 발생 시 국가와 시민의 안전 및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비상사태 대응을 총괄한다. 비상대비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은 이러한 대응 체계의 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군에 비상 계획 수립과 대응을 촉구할 수 있으며, 군은 민간의 요청에 따라 홍수 구제, 폭탄 처리, 어업 보호, 주요 국가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대민 지원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2012년 올림픽 경기에서는 18,000명의 병력이 지원되었으며, 영국군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고도의 대비 태세를 갖춘 3개 대대를 지정해 1,200명이 24시간 대기 중이다. 다만, 대민 지원 활동은 대부분 국방 예산에서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영국 국방부, 2012).

영국은 최종적인 수단으로 군부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민간 지원청(MACA: Military Aid to the Civil Authority)이 관여한다. 이 기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의 지원을 조정하며, 여러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대응한다. 주요 기관으로는 소방 구조 국, 응급의료기관(앰불런스 등), 해안 경비청(바닷가 지역 담당), 카운티 및 디스트릭트 지방정부, 지역 병원(NHS 병원), 보건의료 청(Health Protection Agency), 환경청(Environment Agency), 주요 기반 시설 기관들(상하수도, 전화 통신, 고속도로, 철도, 가스 등), 지역 통합 행정청, 군대(Military Aid to the Civil Community), 자원 봉사 단체 등이 포함된다(영국 내각사무처, 2022. B).

마) 일본

일본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며 현재의 재난관리 체계를 발전시켰다. 일본의 재난관리법은 재해대책 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방재 책임, 방재 계획,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 다양한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주요 위기 관련 법률에는 소방법, 수방법, 석유 콤비나트 등재해방 지법, 그리고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조치법 등이 포함된다(일본 내각부, 2022). 일본의 대민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자위대법에 따라 통합적으로 규정된다. 자위대법에 따르면 자위대가 대민지원을 위해 출동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은 크게 4가지로 나뉘며, 이에는 해상 경비 행동, 재해 파견, 지진 방재 파견, 그리고 원자력 재해 파견 등이 포함된다. 재난 발생 직후, 방위청과 자위대는 정보 수집과 연락을 통해 활동 체계를 확립하고, 동시에 인명 구조, 구급 활동, 의료 지원, 소방 활동 등을 포함한 응급 대책을 즉시 실행한다.

일본 자위대는 대민 지원 활동에서 다양한 정부 기능을 지원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 주요 활동에는 ① 불발탄,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 제거

② 정부 공공업무 및 기타 사업 지원 ③ 각종 경기 및 행사 지원 (의장 행사, 통신 및 수송 지원, 의료 지원, 긴급환자 응급처치, 질서유지 등) ④ 군의 특수 기술 및 지식 분야 민간 전파 교육 지원 ⑤ 긴급 구조활동(낙도와 벽지 구급 환자 긴급 후송 및 주민 의료지원) 등이 포함된다. 자위대의 대민 지원 활동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례들을 남겼다. 예를 들어, 1993년 7월 홋카이도 대규모 지진 당시 자위대는 약 3만 8천 명의 인력과 1,600대의 차량, 760대의 항공기, 200척의 함정을 동원하여 1개월간 지원을 제공했다(일본 방위성, 1999). 또한, 1999년 간사이 지방 고베시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에도 자위대가 동원되어 구조 및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였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시, 일본 방위상은 효율적인 구조 및 재건 활동을 위해 자위대 내에 육·해·공군 통합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통합부대는 자위대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 구조를 위한 통합 임무 부대로 운영되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에 의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자위대의 지원이 있었다(일본 방위성, 2011).

제 2 절 대민지원 체계

1) 군 대민지원 지침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대민지원은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은 후, 군 작전과 기본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 능력을 평가하여 우선 지원하고, 이후 상급 부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국방부, 2022. G). 지원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한 방법으로 관련 지역 대책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대민지원 우선순위는 이재민 집단 대피 지역, 주민 생계와 관련된 물자, 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을 먼저 고려하며, 피해 지역의 상황에 맞춰 지휘관의 통제 속에 대민지원 범위가 설정되어 지원된다. 또한 대민지원에 필요한 장비의 소모성 물자(연료, 수리부속 등)는 지역 대책본부와 사전 협의 후 지원되며, 이후 정산된다. 군수물자(양곡, 피복류 등)의 지원은 사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진행된다. 대민지원 활동에서는 민폐를 근절하기 위한 사

전 교육이 이루어지며,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미담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또한 해안 경계 작전 부대는 경계 임무에 집중하면서도 가용 범위 내에서 대민지원을 하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지원이나 단순노동 일손 돕기는 금지된다. 복구 작업 완료 후에는 숙영지 정리 등을 통해 완벽한 전장 정리를 실시해야 한다. 재난 복구를 위한 예비군 동원은 수임 군 부대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동원 결과는 즉시 보고된다. 대민지원 시에는 임무에 적합한 복장을 통일하여 착용하며, 복구 지원 시에는 전투모, 체육복, 전투복 하의, 전투화를 착용하고, 지뢰탐지기 사용 시에는 지뢰 덧신 등을 추가로 착용한다. 마지막으로, 대민지원 과정에서 급식은 자대에서 진행하여 민폐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2) 권한위임

대민지원에 관한 위임 권한은 각급 지휘관의 계급과 임무 범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군의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려는 조치다. 예를 들어, 사단장과 여단장은 소대급 이하 병력, 차량 5대, 중장비 2대 이하의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러한 제한은 지역 단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군단장의 경우 중대급 이하 병력과 차량 10대, 중장비 3대 이하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는 군단 단위에서 좀 더 큰 규모의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된 지원 체계이다. 군사령관은 대대급 이하 병력과 차량 15대, 중장비 5대 이하로 보다 광범위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주요 재난 지역에서 초기 대규모 복구와 구조 작업이 필요할 경우 적합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참모총장은 여단급 이상의 병력과 차량 16대 이상, 중장비 6대 이하의 지원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적 규모의 대형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군의 대규모 동원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여기에는 군 장비의 지원에 필요한 유류, 수리 부속품, 의료약품

등의 소요 예산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각급 지휘관은 지원 요청 시 군의 주 임무인 국가 방위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대민지원을 위한 자원 투입이 군의 전투 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대민지원 후에는 사용된 장비와 병력의 복구 및 재보충을 신속히 수행하여 다음 임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3)대민지원 가능 및 불가능 사항

자연재해나 재난 발생 시 군은 모든 지원을 전담할 수 없으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국방부, 2022. H.) 이러한 구분은 [표 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2-5]

지원 가능한 사항	지원할 수 없는 사항
●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 사업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 재난 등의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사후 조치사항 ● 개인(민간인)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가 시책에 부합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국민편익 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 민·관·군 유대 강화, 군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국민 안보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각종 법규에서 국방자원의 지원을 정한 경우 ● 기타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사항 ● 국방목표 및 국방 정책에 배치되는 사항 ● 군 기본 임무 수행에 지장 및 군사 보안에 유해로운 사항 ● 군의 위신에 손상을 주거나 장병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정치적 성격의 행사, 개인영리, 사업 주체자가 수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사회 정의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항 ●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 단 국방부 지시 및 승인 사업은 제외

육군교육사령부. (2005). 전개서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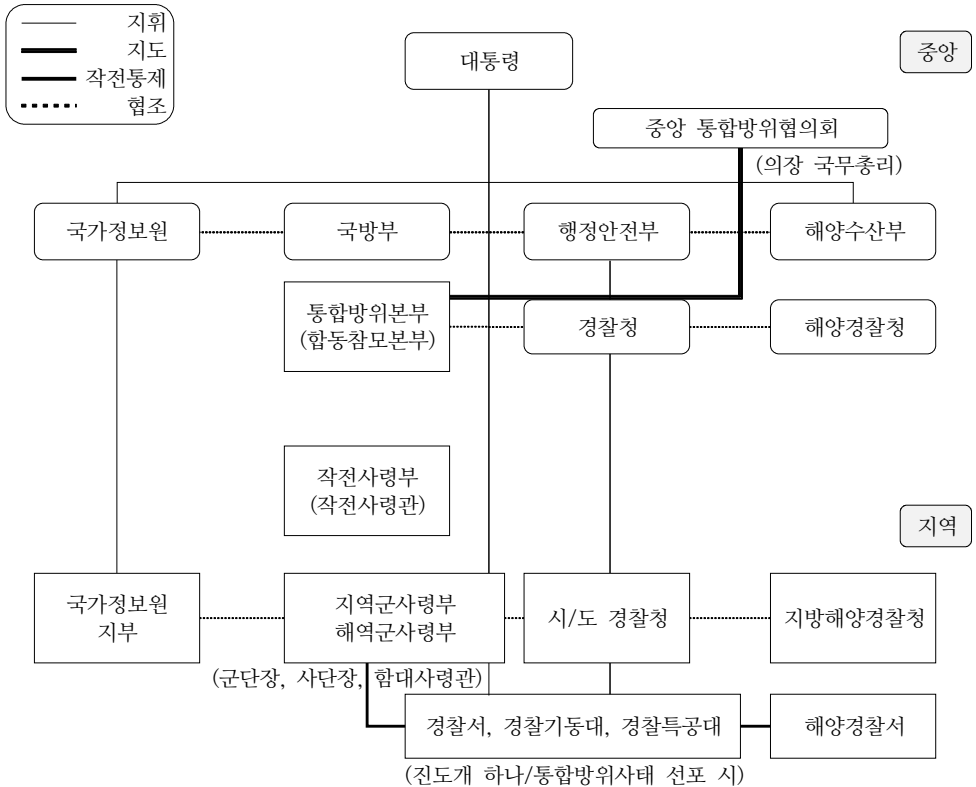
4)대민지원 시기 및 통제

대민지원의 시기와 통제는 행정관서의 요청 또는 피해 지역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 재난 상황에 따라 선지원 후보고 또는 보고 후 지원이 진행되며, 대민지원 부대는 항상 건제를 유지하면서 편성된다. 부대별 지휘관은 현장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여러 부대가 동시에 지원에 나설 때 사단장이 통제하는 통합 지휘관을 임명하고, 유·무선 통신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간 통제 체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지휘 체계와 통제 절차를 통해 대민지원 활동은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5)통합방위기구

국가는 방위 요소를 육성하고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지역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 지원본부 등의 통합방위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국가 방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 원활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각 기관은 지휘 및 협조 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할 때 각 부처와 부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협조와 지휘 체계는 통합방위 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며, 이러한 협력 체계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해 관련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협업한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지휘 및 협조 체계는 [표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2-6]



지역단위 민·관·군·경·소방 통합바위체제(지역 통합바위협의회의 및 통합바위지원본부) 협의회의 지원기구

국방부. (2022). "국가 통합바위기구의 운영과 역할," 국방백서 2022 102-103쪽.

중앙 통합바위협의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의 통합바위 관련 최고 의결 기구로서, 통합바위 정책의 수립과 통합바위 작전 및 훈련 지침을 하달하며, 통합바위사태 선포 및 해제, 정부 각 부처와 관계기관 간의 통합바위 관련 업무를 조정한다. 또한, 통합바위 작전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합바위본부는 통합바위 업무를 주관하는 기구로, 합동참모의장이 본부장이 되어 통합바위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통합바위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감독한다. 또한, 통합바위 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을 수립하며, 통합바위 작전과 훈련에 관한 지침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조정·통제한다. 통합바위본부는 통합바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의·조정과 정부 내 업무 협조를 담당하며, 이를 위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에 설치되며, 의장은 해당 지역의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된다. 이 협의회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및 해제, 통합방위 작전 지원 대책 수립, 취약지역 선정 및 해제,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지원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설치되어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한다. 또한,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지원, 주민 신고 체제의 확립, 동원 업무의 지원 등을 관장한다.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대민지원 사례

제 1 절 긍정적 사례

1)코로나19

국방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적·물적 의료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국군수도병원을 시작으로 국군 고양, 대구, 대전, 포천병원 등 군 병원들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고, 최대 597개의 병상을 제공하였다(국방부, 2022. 1). 2020년 12월에는 국방 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여 285개 병실을 제공, 군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2022년 현재까지 총 1만 3천여 명의 확진 환자를 치료하며 국가적인 병상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또한, 군의관과 간호 인력 16만여 명이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으로 파견되어 의료 지원을 펼쳤으며, 2022년 3월에는 신임 군의관 181명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병원, 상급종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대응상황실에 투입하였다. 해군 함정을 활용하여 도서 지역 해상접종 지원도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하기 위해 군 의료 인력은 전국 예방접종센터와 요양병원 등에도 투입되어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지원하였다. 특히 2021년 6월,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 지역 주민 680여 명에게 해군 함정을 활용한 해상 순회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졌다. 해군 함정을 이용한 백신 접종 지원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이 사례는 2021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와 질병관리청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

다. 이는 군이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책으로 3T 전략(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과 사회적 거리 두기, 전 국민 백신 접종 등을 시행하였다(질병관리청, 2021). 이러한 방역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인력의 필요성이 급증했다. 방역과 치료,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적절한 행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2020년 1월부터 전국 8개 공항과 13개 항만 검역소에 81명의 행정 지원 인력을 투입한 이후, 2022년까지 공항·항만 검역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예방접종센터, 역학조사 및 방역·소독 업무 등에 연인원 119만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전국 방역 현장을 지원했다. 특히 2022년 1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방역 당국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1천여 명의 추가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방부는 이에 응답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국방부, 2022. J). 이러한 군의 지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군이 국민의 군으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주며, 방역 체계에 필수적인 기여를 했다.

2) 수해복구

[사진3-1]



사진제공=해군항공사령부

해군은 2022년 9월 12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 지역에 대한 대민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해군은 피해 복구 작업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해군 항공사령부는 포항시 고성군 동해면에 150여 명의 장병과 함께 굴삭기, 소방차, 트럭 등 장비를 동원해 침수 피해 가구 정리와 토사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방역 및 소독 작업을 위해 남성초등학교와 장기면 도로의 토사 제거도 수행했다. 해군 59 기동 건설 전대는 피해 복구를 위한 건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포항 지역의 하천 정비와 제방 복구 작업을 수행했다.

[사진3-2]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지난 13일 오전 대전 서구 용춘동 정뱅이마을에서 육군 장병들이 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새벽 정뱅이마을은 폭우로 마을 전체 27가구가 모두 침수됐다. [연합]

또한, 국방부는 2024년 7월 말 집중 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 신속하게 대민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지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장병과 장비를 동원하여 피해 복구에 나섰다. 예를 들어, 육군 76사단은 홍천군에서 2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농수로와 도로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해군 3함대 사령부는 목포 지역에서 도로와 농경지에 쌓인 토사 제거 작업을 수행했다. 또한, 군은 이러한 복구 작업 외에도 수해 예방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군은 해상에서 부유물과 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였고, 육군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수해 예방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민지원은 재해 발생 시 군이 맡는 중요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민군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산불 복구

[사진3-3]



산불 피해복구 지원 나선 군 장병 (강릉=연합뉴스) 27일 해병대 2사단 장병 400여명이 인천 강화군 마리산 산불 현장에 투입돼 잔불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병대 2사단 제공)

최근 해병대 2사단은 2023년 3월 강화도 마리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했다. 산불 진화 후, 해병대는 400여 명의 장병과 1,400여 개의 장비를 투입해 소방 당국과 협력하여 잔불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역의 요청에 즉시 대응하여 피해 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이와 같은 대민지원 활동은 군의 재난 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사진3-4]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나선 군 장병 (강릉=연합뉴스) 육군 8군단 예하 102기갑여단
2023.4.12 [육군 8군단 제공.]

8군단은 2023년 3월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쳤다. 산불 발생 직후, 군은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 20여 대와 4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민가와 문화재 주변에서 예방 살수와 뒷불 진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야간에는 열상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 그 후, 12일에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 200여 명을 투입해 구호품 운반과 산불 잔해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8군단은 과거에도 고성산불이나 폭설 등의 재난 발생 시 병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피해 복구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최기훈 중령은 "강릉 산불 피해가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제 2 절 부정적 사례

1) 해병대 수색 순직사고

23년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예천 지역에 해병대 1사단 신속 기동부대 1,600여 명이 투입되어 실종자 수색 및 피해 복구 작전을 진행했다. 군은 재난 발생 직후부터 구조작전을 시작했고, 육군 특전사는 15일에 충북 일대에서 구조 활동을 알리기도 했다. 해병대의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 다른 군은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 대민지원 활동을 이어갔다.

공군은 2022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16 전투비행단의 장병들이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지역에서 민가 복구를 지원하고, 제6 탐색 구조 전대 소속 항공구조사들이 충북 오송의 침수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해병대의 대민지원 소식은 늦게 알려졌다, 해병대 1사단은 2022년 태풍 피해 당시 큰 역할을 했던 만큼 이번 소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2022년 7월 15일 경북 재난상황실에서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실종자 수색 임무를 부하들에게 3일 동안 전달하지 않고, 17일에서야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다. 또한, 신속하게 출동 명령을 내렸으나, 안전대책과 장비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본부의 보고서에 명시됐다. 임 전 사단장은 이를 부인하며, 지휘관 회의에서 실종자 수색을 공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진술에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작전통제권이 해병대에서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으며,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예하 부대에 구조작전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본부 중간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이 수색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위험성 평가 없이 작전 전개를 재촉했다고 기재됐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이 군화 대신 장화를 신고 수중 수색을 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본부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이 수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고 작전을 서두른 것으로 기재됐다. 특히 해병대원들이 장화를 신고 수중 수색을 하게 된 점과, 18일에는 안전교육과 위험지역 평가에도 불구하고 병력 투입을 강하게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17일에 포병여단에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의 수색 작전이 무리하게 진행된 이유로 자신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변 수색은 지상 및 육상에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병대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작전을 펼쳤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며, 그는 조사의 중간결과를 공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해병대 1사단이 KAAV와 마린온을 투입해 대민 지원 작전을 진행했다.

19일 오전 10시 31분, 해병대사령부는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석관 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실을 전했다.

군인들이 대민지원 활동 중 사고를 당한 사례는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사건이 주목을 받는다. 당시 해병대 장병들이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으나,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대민지원 중 군인들이 직면하는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당시 해병대가 수행하던 구조 작업 중 큰 위험에 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1년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한 해병대의 구조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도 있다. 이 사고 또한 군인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민간인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군인들의 대민지원 활동이 때때로 생명과 직결되는 큰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폭설 사다리 추락사고

2014년 2월의 그날을 백현민 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강원도에 며칠째 폭설이 내려서 계속 눈을 치웠어요. 부대 근처로 대민 지원을 나갔고 마지막에 부대 제설을 했어요. 지붕에 올라간 것은 오후에, 해 좀 높게 뜨고 나서였어요.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슬레이트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건물이어서 눈이 더 쌓이기 전에 지붕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간부로 병사고 할 것 없이 올라가서 치우더라고요. 위에 올라가 있던 간부가, '현민아, 너도 올라와서 치우자'라고 해서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백현민 상병은 순식간에 3m 아래로 떨어졌다. 한 발은 지붕, 한 발은 사다리에 걸친 상태였는데 갑자기 사다리가 접혔던 탓이다. 오른 손목뼈가 20조각 이상 잘게 부서졌다.

백현민 씨는 손목을 완전히 굽힐 수 없게 됐다. 만기 제대 후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았다. 아직도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고 매일 통증 치료약을 먹는다. 입대 전 백현민 씨는 대학 경호학과에 다니고 있었다. 경호원이 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운동신경이 좋다는 장점을 살릴 만한 일자리는 찾기 어렵다. 방향을 틀어 사무직 일자리를 찾아보고는 있지만,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도, 글씨를 오래 쓰기도 어려워서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연금 90만 원 받는 것보다 내 힘으로 백만 원 받는 게 더 낫죠. 입대하기 전에 생각하던 장래 희망은 날아가 버리고 앞으로 뭐 해야 할지. 고민이 그냥 고민이 아니라 불안해서 고통스러울 정도여서... 인생의 방향을 갑자기 잡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라고 인터뷰했다.

[표 2-7]



군 안전사고 현황 (2020). 국방부

[표 2-8]



군 안전사고 원인(2020). 국방부

군에서의 안전사고는 훈련뿐만 아니라 부대 관리 업무나 대민지원 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특별히 위험하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작업 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한 예로, 겨울철 제설 작업 중 한 장병이 상처를 입은 사례가 있다. 이는 군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작업이었지만, 이에 따라 해당 장병의 군 생활과 이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회 국방위원회(2023)가 국방 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안전사고 통계(국방부, 2022. K)에 따르면, 매년 약 70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20명가량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 중 3분의 1 이상은 차 사고가 차지했으며, 화재, 추락·충격, 항공 및 함정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육군에서는 장갑차, 군용 트럭, 지게차 등 전투 및 중장비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고, 해군에서는 함정 입항 시 훗줄 작업 중 사고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공군에서는 장비 점검 중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특히 군이 분석한 사고 원인의 약 80%가 부주의, 안전 수칙 및 절차 미준수, 조작 미숙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의 상당 부분이 체계적 관리 부족보다는 개인의 부주의나 숙련도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이 다소 개인의 책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시스템적 개선과 안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 3 절 해외 사례

1) 미국 :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5)

[사진3-5, 사진3-6]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멕시코만 해안 지역을 강타한 29일 미시시피주 걸프포트의 해안에 정박해 있던 배 한 척이 파도에 휩쓸려 고속도로 위로 올라와 있다. AP연합

goodnews 게시판

배경: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특히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가 큰 피해를 보았다. 홍수와 함께 주거 지역, 도로, 공공시설이 파괴되어 대규모 구호가 필요했다.

군의 역할 및 대응: 미국 국방성은 주 방위군과 정규군을 투입해 구조 활동, 구호 물자 제공, 그리고 임시 거처 마련 등 다양한 대민 지원을 펼쳤다. 물류 및 교통 지원, 임시 병원 설치 등 민간 사회에 필요한 기반 지원도 진행되었다.

민·군 협력의 특징: 주 방위군과 연방군이 협력하여 대민지원을 펼친 점에서 민·군 간 협력의 중요성이 주목받았다. 또한 주 정부와 연방정부 간 조정과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도출되었다(미국 연방재난관리청, 2005).

의의 및 한계: 미국의 대규모 군사 지원은 초기 재난 대응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일부 조정 문제로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를 통해 민·군 협력 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일본 : 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 (2011)

[사진3-7, 사진3-8]



▲ 일본 노토 반도 규모 7.6 강진 뒤 일어난 화재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시장이 잿더미가 되어 있다. (사진=위키피디아)

▼ 와지마시의 인근 해안은 지반이 약 4m나 올라와 육지가 넓어지며 해안선이 바다쪽으로 밀려났다. (사진=위키피디아)

미국의 동일본대지진 구호 활동 '친구작전' 갈무리. (사진=위키피디아)

배경: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는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선 위험까지 발생했다.

군의 역할 및 대응: 일본 자위대는 즉각적인 구조 및 구호 활동에 나섰으며, 미군과 협력한 오퍼레이션 토모다치를 통해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식수 및 식량 제공, 방사선 대응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일본과 협력했다.

민·군 협력의 특징: 민간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크게 발휘된 사례로, 특히 방사선 대응을 위한 군대와 민간의 협력 및 자위대의 능력 향상이 주목받았다.

의의 및 한계: 일본의 군사 및 민간 협력 사례는 국가 간 군사 협력이 재난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일부 위험성 노출 문제는 향후 재난 대응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3) 필리핀 : 태풍 하이옌(2013)

[사진3-9, 사진3-10]



필리핀 슈퍼태풍 '하이옌'이 지나간 마을 필리핀 태풍, 하이옌 '베트남 북동부 상륙'
(AP=연합뉴스) 사진 = 하이옌 © SBS

배경: 2013년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강타하며 다수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군의 역할 및 대응: 미국,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의 군대가 필리핀 구호 활동에 참여했으며, 특히 미국은 대규모 항공 및 의료지원을 제공했다. 필리핀 군대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지역에서 신속한 구호 활동을 펼쳤다.

민·군 협력의 특징: 다국적 군대의 협력으로 초기 대응 속도가 높아졌으며, 국제적 차원의 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다자 간 군사 공조의 효율성이 확인되었다.

의의 및 한계: 필리핀 태풍 사례는 국제적 군사 협력이 재난 대응에 유효함을 보여주었으나, 다국적 협력에 따른 조정 문제와 물류 관리의 어려움이 개선 과제로 남았다(필리핀 국가 재난 위기관리위원회, 2013).

4) 서아프리카 :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2014)

[사진3-11, 3-12]



외교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1진 활동
모습. (사진제공=보건복지부)

BBC뉴스
이모겐 파울키스 (Imogen Foulkes) 기자,
BBC 뉴스, 제네바 2019년 3월 8일 에볼라
조치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실패하다' 이모겐
파울키스, BBC 제네바 특파원

배경: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공중 보건 위기가 발생하였다.

군의 역할 및 대응: 미국과 영국 군대는 현지에 의료 시설을 설치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또한 의료 인력을 훈련하여 바이러스 확산 억제와 감염자 관리에 기여했다.

민·군 협력의 특징: 군대가 의료 및 방역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로, 보건 위기 상황에서 군의 역할이 확장된 예시다. 의의 및 한계: 에볼라 대응 사례는 전염병 대응에서 군대가 기여할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군의 방역 활동에 대한 현지 주민의 반응과 문화적 이해 부족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남았다.

제 4 장 활성화 방안

제 1 절 군 특수성에 따른 개선방향

1) 군 특수성 반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군은 주로 국가 방위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비군사적 활동인 대민지원은 그 수행 시기가 한정적이며 우선순위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대민지원 시 군이 수행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명확할수록 군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대민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민지원의 우선순위, 자원의 제한 조건, 민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군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 시나리오 등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법적·제도적 정비는 또한 민간 주도과 군의 보조적 역할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여, 긴급상황에서도 군이 체계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 대민지원 전담 부대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대민지원 활동은 군의 군사적 특성과 다른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대민지원에 특화된 부대와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담 부대를 편성하거나 대민지원 전담팀을 조직 내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민지원 전담 부대는 자연재해, 공중 보건 위기, 환경재해 등 다양한 비군사적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전담 부대 및 인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대민지원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담 부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과 훈련을 통해 대민지원 상황에서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대민지원을 위한 기술적·전술적 지식 습득을 지원한다. 기술 및 장비 지원을 강화하여 대민지원 시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대민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3) 군 특수성에 따른 유연한 작전 수행 체계 마련

군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민지원 작전 수행 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 협약 체결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발생 초기에는 군이 신속하게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 및 지자체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군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는 경우,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민간 주도의 지원 체계와 군의 보조적 역할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로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민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군 협력의 기초를 다진다. 정기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대민지원 훈련을 해 재난 상황에서 민·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민지원 작전 시의 준비도를 높인다.

4) 평시 대민지원 홍보 및 인식 제고

군의 대민지원 활동은 비상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군의 대민지원 활동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시 대민지원 활동을 통해 군의 존재 가치와 대민지원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비상시 대민지원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 대민지원 활동에서의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평상시에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군의 대민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5) 자원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대민지원 활동에서 군의 자원과 인력은 유한한 자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민지원 작전 시 임무 우선순위 설정과 자원 및 인력 배치 계획의 최적화를 통해 군 본연의 임무와 대민지원 활동이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비상 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지원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자원의 확보와 배치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상황에 맞춘 유연하고 실질적인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대민지원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이러한 체계는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군과 민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 2 절 민·군 협력

1) 민·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협약 체결

재난 발생 시 군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서는 군과 민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와의 사전 협약 체결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비상 상황에서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전 협약 체결은 재난 발생 시 혼선을 줄이고, 서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민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각 지역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군의 지원 범위, 필요한 장비와 인력, 정보 공유 방식 등을 명시하여 각 기관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협약을 기반으로 지역별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자원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통합 지휘 및 의사소통 체계 강화

효과적인 대민지원을 위해서는 통합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의사소통 체계가 필수적이다. 재난 시 다수의 기관이 협력하는 상황에서는 각각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통합된 지휘 체계 아래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통합 지휘 체계를 통해 지휘명령이 일관되게 전달되고, 현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군과 민간 기관의 협력을 위해 일관된 지휘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통합 지휘 본부를 설치하여 중앙에서 지휘 및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대와 지자체 간의 협력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군과 민간 기관 간에 실시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긴급 연락망 및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기적인 민·군 협력 훈련 실시

민간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민·군 협력 훈련이 필수적이다. 협력 훈련을 통해 군과 민간 기관 간의 협력 절차와 소통 방식을 익히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민·군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를 통해 대민지원의 효과성과 대응 속도를 높이고, 협력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방안을 모색한다. 이 훈련은 재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며, 민·군 간 협력 체계를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훈련 후 각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여,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4) 민·군 협력 관련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민·군 협력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대민지원 활동에 대한 국

민적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민지원 활동의 성과와 민·군 협력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성공적인 민·군 협력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과 민간이 협력하는 활동이 지역사회의 안정과 복지에 기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알린다. 민·군 협력이 대민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대민지원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킨다.

5)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

재난 대응은 군 단독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재난 유형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군의 대민지원 활동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해당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기적인 협력 훈련에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군의 대민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화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민간과 군의 신뢰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민·관·군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제 3 절 조직 및 예산

1) 대민지원 전담 조직의 구축과 운영 효율화

대민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담 조직을 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군 내 대민지원 관련 조직은 제한적이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나 인력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민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조직 내에서 대민지원 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민지원 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군 내에 대민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각 부대와의 협력과 조정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민지원 활동을 전담할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민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 효율화

대민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대민지원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매년 불규칙적으로 배정되거나, 긴급 재난 발생 시 예산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민지원 전용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민지원 전용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군이 대민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한 예산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대민지원 활동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비상 예비 예산 제도의 도입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예비 예산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비상 예비 예산은 군의 대민지원 활동을 위한 긴급 자원으로, 재난 발생 직후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는 군과 정부의 재정적 준비 상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상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재난 발생 시 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금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 예산은 매년 일정 부분을 편성하고, 이를 군의 대민지원 활동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비상 예비 예산은 군의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역사회 및 민간과의 예산 협력 체계 구축

대민지원 활동은 군의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예산 분담이 필요하다. 민간 기관과의 협력은 재난 대응에 있어 군과 민간 자원의 효율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며, 예산의 분담을 통해 군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지역 사회와 민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민지원 예산을 분담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재난 발생 시 군이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이다. 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과 군의 자원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을 설정한다.

5) 대민지원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

대민지원 예산의 효율적 배분은 군의 대민지원 활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예산은 제한된 자원 내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 활동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민지원 예산의 집행과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예산을 배정할 때, 재난 대응에 가장 중요한 항목과 필요한 지원을 먼저 반영하여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대민지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군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절 대민지원 활동의 사회적·경제적 효과 분석

1) 사회적 효과

대민지원 활동은 군과 국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민군 협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재난 상황에서 군이 보여주는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응은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러한 활동은 장기적으로 민·군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이끈다. 재난 발생 시 군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투입되어 구조 및 복구 작업을 수행하면, 국민은 군의 역할과 중요성을 체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에서 해병대가 수행한 대민지원 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신뢰를 심어주었다. 이러한 신뢰는 군이 단순히 국가 방위에 국한된 역할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또한 대민지원 활동은 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지역 주민들과 군이 협력하여 재난 복구를 진행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고취되고 민군 간 연대가 강화된다. 이는 재난 이후에도 군과 지역사회 간 지속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군의 적극적인 대민지원 활동은 한국의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에 나서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협력 체계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은 군 내부의 사기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경제적 효과

군의 대민지원 활동은 재난 복구 비용 절감과 경제 활동의 조기 정상화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대민지원은 공공 비용 절감과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군은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재난 복구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군이 투입되어 잔해물 제거와 방화선 구축 작업을 진행하면서, 약 20%의 복구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대규모 복구 작업에 군이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군의 신속한 대민지원 활동은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활동이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돕는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군 병원이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고 군의관이 백신 접종센터에 투입됨으로써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의 정상화를 촉진했다. 마찬가지로 재난 복구 과정에서 군이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농업, 어업 등 지역 기반 산업의 복구를 지원하면, 지역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 5 절 전투준비태세

1) 전투 준비와 대민지원 활동의 균형 유지

대민지원 활동이 군의 전투 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의 본질적인 임무는 국가 방위와 전투임무 수행에 있으며, 대민지원은 이 임무와 상충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대민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대민지원 활동은 군 본연의 임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민지원 활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국가 방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군은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재난 지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전투 준비와 대민지원 활동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지만,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전투 준비는 전담 부서가, 대민지원은 전담 부대가 담당하게 하여 혼선이 없도록 관리한다.

2) 전투준비태세와 대민지원의 상호 보완적 연계

군의 전투준비태세와 대민지원 활동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대민지원 활동을 통해 군은 훈련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재난 대응을 수행하며, 동시에 이러한 활동은 군의 전투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민지원 활동이 군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대민지원 활동은 실제 상황에서 군의 작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예를 들어, 군은 대민지원 활동을 통해 실시간 상황 대응 능력과 협력적인 작업을 훈련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군은 재난 지원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군사적 대응 능력에 통합시킬 수 있다. 군의 전투준비태세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민·군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민간과의 협력 훈련을 통해 군은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민간과의 협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민지원 활동을 통해 민간과의 협력 경험을 쌓음으로써 전시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

3) 전투 준비태세와 대민지원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체계 구축

군이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대민지원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체계는 군의 본래 임무 수행과 대민지원 활동이 상호 간섭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대민지원 활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워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부대는 대민지원 활동을 위한 예비 계획을 마련하고, 전투준비태세와 대민지원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투준비태세와 대민지원 활동을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는 통합 지휘 체계를 구축하여, 대민지원 활동 시 군의 본래 임무인 전투 준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 대응을 할 수 있다.

4) 대민지원 임무 수행 중 전투준비태세 유지 방안

재난 상황에서 대민지원 임무를 수행할 때, 군은 여전히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대민지원 임무의 수행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대민지원 임무 수행 중에도 전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항상 준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대민지원 활동을 위해 배치된 인력과 자원이 전투 준비 상태를 방해하지 않도록, 인력 및 자원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대민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여 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대민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부대는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훈련과 준비 활동을 병행한다. 예를 들어, 대민지원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전투 준비에 필요한 전술 훈련과 장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5) 전투준비와 대민지원 활동의 전략적 통합

군은 대민지원 활동을 통해 전투준비를 더욱 전략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 전투준비와 대민지원 활동은 상호 보완적이며, 군이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은 군사적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여 대민지원과 전투 준비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민지원 활동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군의 전반적인 전략적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군은 대민지원 활동이 군의 전투 준비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양 측면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 군의 전투 준비와 대민지원 활동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작전 연계성을 강화하여, 재난 상황에서 군이 전투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 절 동기부여

1) 대민지원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

군 장병들이 대민지원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자기 임무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민지원 활동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민 보호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장병들에게 대민지원의 의미와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교육하고,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대민지원 활동이 군의 본래 임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군이 국가 방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교육한다. 대민지원 활동을 실제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대민지원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장병들이 활동의 중요성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2)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

대민지원 활동에 참여한 군 장병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인정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동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보상 체계는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노력과 공헌에 대한 인정과 감사의 표현도 포함되어야 한다. 군 장병들이 대민지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민지원 활동에 참여한 장병들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성과급을 제공하여 활동의 중요성과 장병들의 노고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대민지원 활동에 참여한 장병에게는 특별 보상이나 포상을 제공하고, 성과를 인정할 기회를 만든다. 대민지원 활동에 참여한 장병들의 노력을 공식적인 행사나 대민지원 보고서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기여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3) 군 장병들의 대민지원 참여를 위한 리더십 발휘

대민지원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지휘관의 리더십이다. 지휘관이 장병들에게 대민지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은 장병들의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휘관의 긍정적인 리더십은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지휘관들에게 대민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여 장병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활동의 목표와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지휘관이 대민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장병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지휘관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장병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장병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4) 대민지원 활동의 성과와 의미를 명확히 전달

군 장병들이 대민지원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의 성과와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대민지원 활동이 실제로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더 큰 동기를 부여받는다. 또한, 활동 후 그들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다시 대민지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대민지원 활동 후, 그 성과를 군 내외로, 공식적으로 공유하여 장병들이 자신이 수행한 활동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재난 복구가 완료된 후, 장병들이 어떤 구체적인 기여를 했는지 알려주고 이를 군의 공식적인 성과로 기록한다. 대민지원 활동에 참여한 장병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여 그들의 참여가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다음 활동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한다.

5) 대민지원 활동을 통한 군의 이미지 향상

대민지원 활동은 군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이다. 군 장병들이 대민지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립되고, 군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다. 대민지원 활동을 통해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군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한다. 이는 장병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대민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대민지원 활동을 통해 군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군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장병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7 절 해외 사례의 교훈 및 적용방안

1) 미국 : 민군 협력 체계의 중요성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중심으로 한 민군 협력 체계를 통해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FEMA는 주 방위군과 연방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재난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지원 요청과 자원 배분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어 재난 발생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교훈: 한국의 대민지원 체계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 재난 대응 조직과 국방부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 요청 및 자원 배분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실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일본 : 재난 대응 전문성 강화

일본 자위대는 동일본 대지진(2011년) 당시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방사선 대응과 같은 고난도 작업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했다. 자위대는 재난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며, 구조 장비와 인력을 전문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재난 발생 직후 자위대 내 통합 부대가 즉각적으로 조직되어 육·해·공 간의 효율적인 협업이 이루어진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교훈: 한국군도 재난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부대를 편성하고, 고난도 재난 상황에 적합한 장비와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위대처럼 정기적인 재난 대응 훈련을 하여 장병들이 실질적인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3) 독일 : 지역화된 대응 체계

독일은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의 중심 역할을 맡고, 연방군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중

양정부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독일은 소방서, 기술지원처(THW), 적십자사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재난 상황에서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교훈: 한국군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맞춤형 대민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군부대와 지자체 간 정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악 지역에서는 구조 작업에 중점을 두고, 해안 지역에서는 해양 재난 대응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 유효할 것이다.

4) 필리핀 : 다국적 협력 체계의 중요성

필리핀 태풍 하이옌(2013년) 당시 미국, 일본, 영국 등 다국적 군대의 협력이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 군사 지원과 민간 구호 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국제사회가 공동의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교훈: 한국군은 국제 재난 대응 활동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국적 군사 협력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구호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외 재난 발생 시 한국군이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해외 지원 메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5) 한국 대민지원 체계에 대한 적용 방안

가) 지휘 체계 표준화

미국 FEMA와 같은 중앙 재난 대응 조직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군과 민간 간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지휘 체계는 신속한 재난 대응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한국형 중앙 조직을 설립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간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한다.

나) 전문 부대 편성

일본 자위대의 재난 대응 부대를 참고해 전문 부대를 육성하며, 재난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한다. 또한 첨단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여 현대적 부대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며, 평시에도 재난 훈련과 교육을 통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전문 부대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민지원을 제공한다.

다) 지역화 전략

독일의 지역 특화 모델을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민지원 전략을 설계한다. 또한 각 지역의 재난 유형에 적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지역 주민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앙과 지역 간의 조화로운 재난 관리 시스템을 확립한다.

라) 국제 협력 네트워크

필리핀의 국제 구호 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교훈을 얻으며, 국제 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 한국군의 역할을 확장한다. 또한 해외 재난 상황에 대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활동을 통해 한국군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제 5 장 결론

군의 대민지원 활동이 단순히 재난 복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군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자원 동원 능력은 재난 발생 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조기 회복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민지원 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민군 협력 체계 구축, 전문 부대 육성, 자원 관리 체계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민지원 활동의 효과는 국민과의 신뢰 구축, 지역사회와 연대 강화, 경제적 복구 촉진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군이 보여주는 헌신적이고 체계적인 대민지원 활동은 단순한 지원 활동을 넘어,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다. 이러한 신뢰는 군의 대민지원 활동이 국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대민지원 활동은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복구를 가속하며,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의 회복에도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군의 대민지원 활동의 구조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한다. 대민지원 활동의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군의 지원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대민지원 활동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회복 속도와 국민 신뢰도 향상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가 도입되어야 한다. 민군 협력 체계의 강화 또한 중요

한 과제이다. 지자체와 군 간의 협력 모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군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휘 체계와 자원 분배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원 배분과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 FEMA나 일본 자위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 적합한 민군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군의 대민지원 활동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실행되기 위해서는 본연의 군사적 임무와 대민지원 활동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 부대 육성, 재난 대응 훈련 강화, 장비 현대화 등을 통해 군의 본래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대민지원 활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국내 대민지원 활동의 경험을 국제적 맥락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다국적 재난 지원 훈련이나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군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적 재난 대응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해외 지원 매뉴얼 개발과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활성화 방안들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법적·제도적 제약, 예산 확보의 어려움, 인력 양성의 한계 등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민지원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군의 대민지원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 공공서비스로, 단순한 재난 복구를 넘어 사회적 신뢰 형성, 지역사회 회복력 증진,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본 연구는 대민지원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이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 연구와 실무적 노력을 통해 제안된 방안들이 구체화하고 실행된다면, 군은 국내외 재난 대응에서 더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고정훈. (2003) 민·군 관계 발전방향. 국방대 연구보고서
- 고창석·양기근. (2012)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과 대비방향.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2호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020). "대민지원 활동의 법적 근거와 정책 개선 방안." 정부 보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국방부. (1998) 군의 종합복지정책 연구. 국방 연구원
- 국방부. (2007) 국방개혁안 2020. 인터넷
- 국방부. (2007) 대민지원활동 업무지침
- 국방부. (2007) 군주둔과 지역경제. KIDA
- 국방부. (2007) 국방환경보전지침서. 한국장애인문화 인쇄협회
- 국방부. (2009). 재난관리업무처리훈령 훈령 제1013호.
- 국방부. (2010). "해외긴급구호 군 수송기 임무지원 체계 구축 현황."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부. (2018) 2018 국방백서
- 국방부. (2019). 재난 발생 시 군과 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국방부
정책 자료.
- 국방부. (2020. A). "2020년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지원 현황."
국방부 보고서.
- 국방부. (2020. B). "코로나19 관련 해외 지원 임무 활동 기록."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부. (2021. A). "향토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지원 협정 및 준비
현황."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부. (2021. B). 우리나라 군용 항공기의 해외사고 대응메뉴얼.
- 국방부. (2022. A). "대민지원 활동의 효과성 평가와 발전 방향." 국방연구소.
- 국방부. (2022. B).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군 지원 활동 보고서."
- 국방부. (2022. C). "2022년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지원 현황."
- 국방부. (2022. D).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에서의 군 구조 활동 보고서."
- 국방부. (2022. E). "최근 5년간 군의 재난 대응 및 대민지원 활동 통계 자료."
- 국방부. (2022. F). "대한민국 해외구호대(KDRT) 합동모의훈련 및 군 공중급유기 지원 현황."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부. (2022. G). "재난 시 대민지원 체계와 부대 임무 수행 지침." 국방부 대민지원 지침.
- 국방부. (2022. H). "자연재해 및 재난 발생 시 군의 지원 범위 규정." 국방부 대민지원 지침.
- 국방부. (2022. I). "군 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과 병상 제공 현황." 국방부 코로나19 대응 보고서.
- 국방부. (2022. J).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추가 인력 지원 현황." 국방부 방역 대응 보고서.
- 국방부. (2022. K). "최근 5년간 군 안전사고 통계." 국방부 발표자료.
- 국방부. (2024). 「재난관리업무처리훈령」(훈령 제1013호).
- 국방부, 행정안전부. (2005).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권헌철. (2008) 군의 효율적인 대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제 16권 1호(통권 제 47집)
- 길병옥. (2010) 국가비상사태 대비 '국가위기대응법' 제정방안에 관한 논고. 군사논단 제 64호 pp.123~148
- 김성일. (2020) 국가 안보차원에서 재난관리체계와 군의 역할에 대한 소고,

- 선진국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 김재원. (2006) 군 장병의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호. (2021). "재난 대응 체계 내 군의 역할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안보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한식. (1999) 병영 스트레스 원인과 대책. 육군 인쇄창
- 독일 연방내무부. (2022). "독일 재난 보호 시스템 내 다양한 협력체계."
- 독일 민간 지원 조직. (2022). "독일 내 민간 지원 조직과 자원봉사자 현황."
- 미 국방부. (2021).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및 민간 지원 체계." 미 합동교범 3-07.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2005). "허리케인 카트리나 교훈: 주-연방 정부 협력의 중요성." FEMA 평가 보고서.
- 박대철. (2012) 우리나라 군의 재난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 대민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이. (2020)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방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박재성, 김은희. (2018). "군의 대민지원 역할과 발전 방향." 국방정책연구, 29(1), 87-103.
- 방재안전연구소. (2018). "국내외 재난 관리 체계 비교 및 개선 방안." 방재안전연구소 보고서.
- 서경훈. (2022).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민간과 군의 협력 전략." 위기관리연구, 15(3), 213-229.
- 선승배. (2018) 재난상황 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 14.
- 송영민. (2021). "포괄적 안보 환경에서의 군사적 대민지원 활동의 확대 필요성." 국가안보정책 연구, 5(1), 78-95.
- 연방위기관리청. (2006). "허리케인 앤드류와 카트리나에 대한 FEMA의 대응 보고서."
- 영국 국방부. (2012). "2012년 올림픽 경기와 군의 대민 지원 활동." 국방부

- 특별 보고서.
- 영국 내각사무처. (2022. A). "영국 재난 안전 관리 책임 기관 및 구성 체계." 내각사무처 비상대비실 보고서.
- 영국 내각사무처. (2022. B). "영국 재난 대응 관련 주요 기관 및 협력 체계." 내각사무처 보고서.
- 오원석. (2000) 신세대 장병의 특성이 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용진. (2016). "조직 구조적 속성이 군 재난관리체제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군본부. (1988). 군사용어술어사전.
- 육군본부. (1998) 육군복지 현재와 미래. 육군 인쇄창
- 육군본부. (2006). 군사용어사전.
- 이용문. (2005) 외국군의 재난관리지원 시스템. 국방연구원 자원관리센터
- 이용철. (2008) 군 대민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희. (2020)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대민지원 개념 및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 일본 내각부. (2022). "주요 재난 대응 관련 법률 개요." 일본 내각부 방재실 보고서.
- 일본 방위성. (1999). "간사이 대지진 대응 활동과 자위대의 역할." 일본 방위성 대민지원 보고서.
- 일본 방위성.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과 자위대의 지원 활동." 일본 방위성 원전사고 대응 보고서.
- 조극래. (2020) 지방정부와 군의 협력적 재난관리체제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선일보. (2017).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군의 재난 대응 현황." 조선일보 보도자료.
- 조영갑. (2005)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서울:북코리아

- 질병관리청. (2021). "3T 전략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현황." 질병관리청 방역 지침.
- 최근우. (2006)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 식. (1996) 군의 대민지원 방안 연구. 국방대 석사학위 논문
- 통일연구원. (2018). "한반도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민군협력체계 구축 방안."
통일연구원 보고서.
- 프랑스 국방부. (2022.A). "프랑스 민방위 전문 군부대의 주요 작전 활동."
프랑스 국방부 보도자료.
- 프랑스 국방부. (2022.B). "국방안전위원회와 시민 안전 총국의 민방위 활동
조정 역할." 프랑스
- 프랑스 시민보호법. (2022). "시민보호법의 대민지원 규정." 프랑스 법률
데이터베이스.
- 필리핀 국가 재난 위기관리위원회. (2013). "태풍 하이옌 재난 대응 중 조정
및 물류 관리 문제." 필리핀 재난 대응 평가 보고서.
- 한국국방연구원. (2018). "대민지원 활동과 군사작전의 균형에 대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
- 합동참모부. (2014)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ABSTRACT

Case Study on Types of Civil–Military Support

Yang Dong Sin

Major in Social Disaster and Safety Policy

Dept. of Social Disaster and Safe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activation strategies for military civil support (MCS) activities, emphasizing their critical role not only in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but also in enhancing social trust and strengthening civil–military cooperation. MCS activities go beyond disaster recovery,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s, fostering resilience in local communities, and mitigating damages during crises. The study identifies challenges within the current MCS framework, such as the lack of legal foundations, insufficient coordination mechanisms, and resource management inefficiencies, and proposes comprehensive measures to address these issues. Key recommendations include strengthen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clearly define the military’s roles and responsibilities during

disasters, establishing standardized communication and resource allocation protocols, and fostering preemptive partnerships with local governments through regular agreements and joint training exercises.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specialized military units and personnel for disaster response, adequate funding mechanisms to ensure prompt action, and balanced integration of MCS activities with the military's primary defense missions. The study also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motivating military personnel to actively engage in MCS activities through transparent reward systems and recognition of their contributions. On an international scale, MCS activities could enhance Korea's global leadership in disaster response, as exemplified by its participation in multinational training and humanitarian missions. By sharing Korea's experiences, the military can contribute to global efforts in disaster resilience and cooper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strategies could transform MCS activities into a cornerstone of Korea's national safety infrastructure, providing a robust and trusted public service.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quantitatively evaluating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s of MCS activities, comparing international models, and exploring sustainable approaches to align disaster response with the military's core mission. By advancing these efforts, the military can solidify its position as a pivotal actor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s, contributing to a more resilient and secure society.

【Key words】

Disaster Management, Civil-Military Cooperation, Emergency Cooperation, Emergency Relief, Community Engagement, Military aid to civil authorities